

UR과 낙농육우산업의 전망과 대책

김 인 식

본회 조직지도부장

장래 예측은 어렵다.

수입개방에 따른 국내 낙농육우산업의 전망에 대해서는 누구도 그 가능성여부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본다. 불확실한 미래의 예측이라는 측면도 그러하거나와 과연 국내산 낙농제품이나 쇠고기가 어느 정도의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느냐 그리고 국산에 대한 국민 선호도가 지속될 수 있느냐에 대해 쉽게 단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한우고기의 우수성을 이야기하고 있고, 시유는 수입이 불가능하니 시유시장만은 그래도 확보할 수 있어 낙농육우업의 가능성을 말하고 있다. 이러한 단순한 판단이 과연 적중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완전개방 상황 이전에 가능한 하나의 추측일 뿐 확실성의 보장이 없다. 기반이 너무 취약한 우리의 경우 단순히 수입제품 혹은 수입계획 자체만의 대비에서 오는 예측일 뿐 수입에 따른 다른 여러 변수 가령 외국산 쇠고기나 유제품의 홍보문제, 유통마진에서 오는 구조적 부조리나 수입상사들의 동향등 다른 여러 변수들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류가 다분히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낙농육우산업 뿐만 아니라 타축종 혹은 타품종 역시 그러하다고 본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예외도 있고 가능성도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농업이 위기임은

확실하다. 5천년 민족사를 이루어오면서 근간을 이루어 민족문화의 바탕, 생존의 바탕이었던 농업이 존립하느냐의 기로에 서있다.

개방해도 가능성이 있다고 열심히 강연하던 유명인사들도 요즘은 풀이 죽은 모습이다. 수출가능성을 제시하면서 전국 유망농산품을 많이 거론했던 품목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농업이 망해들면서 농민 모두가 수출가능성 품목에 매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제 겨우 시장개척 단계이거나 수출 전품에 불과할 뿐 농민이 업종전환하여 치중할 수 없는데서 과장홍보가 지적되고 있다. 국내 농산품의 가능성을 앞서서 홍보하기 전에 취약한 농업기반 투자에 꾸준한 노력이 없었고 개방의 현실 앞에서는 대책이 없는 것이다.

호당 사육두수가 송아지를 포함하여 18두 규모로 아직 전업단계를 바라보며 열심히 땀을 쏟는 단계이고, 시유시장 의존도만 바라보며 유제품의 가능성은 거의 불확실한 것이 우리 낙농의 단순한 모양으로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57만호의 농민들 대다수가 한두마리 한우를 기르면서 그야말로 부업단계로서 유지하고 있고 사육기반을 이루면서 전업형태는 꿈꾸기 어려운 상황, 그리고 쇠고기 유통구조의 모순으로 한우맛 우수성을 들먹이면

서도 국민들이 안숙고 한우사먹기 어려운 상황의 국내 육우산업관도 여기에 수입이 확대 일로를 차단할 경우 두세배 값싼 쇠고기가 범람하게 되는 것을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국내 쇠고기 특히 한우존속을 통한 육우산업의 가능성 예측할 수 있겠는가. 더우기 외국보다 높은 생산비를 지불하고 소를 키우는 상황에서.

UR협상 문제 많았다.

지난 12월 13일의 UR협상 직전까지만 해도 정부에서는 쇠고기와 유제품에 대해서는 관세 상당치를 부과하는 방식의 협상계획을 계속 홍보하였다. 정부의 협상의지가 있었는지는 몰라도 그렇게만 되었다라고 가능성을 점칠 수 있었다. 가령 쇠고기나 유제품은 2~3배 가격차가 있기 때문에 이를 관세화 할 경우 국내에서는 품질향상 위주로 노력을 기울이면서 우리 제품 먹기운동을 효과적으로 전개한다면 나름대로 대응이 가능하리라는 판단이었다.

협상을 불과 몇시간 앞두고 개최된 우리협회의 긴급이사회에서도 이를 보고받고 정부의 협상자세를 지켜보기로 하였으나 협상결과는 전혀 달랐다. 쇠고기는 2000년도까지 킬로그램으로 확대 수입하여 225천톤으로 늘려 나간다는 것이다. 국내수요에 관계없이 의무수입할 수 밖에 없고 그리된다면 수입쇠고기 안먹기 운동도 킬로그램범위내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었다. 더우기 SBS 물량은 계속 확대하여 '99년도에 70%를 차지하게 되고 SBS 물량에 대한 부과금을 오히려 줄여서 2000년도에는 아예 없애기로 하였으니 글자 그대로 무한 경쟁으로 표현하는 것이 옳은가보다.

지난 '87년부터 쇠고기 수입 반대를 외치며 도심의 거리에서 술한 눈물과 피를 흘렸건만 개방은 순간적으로 결정되고 말았다. 유제품의 경우 '95년부터 치즈와 조제분유가 개방되고 유장이 킬로그램으로 매년 확대 수입하게 되었다. 이번 협상에서 직접 거론되지 않은 전지분유, 탈지분유, 버터, 연유, 유당 등의 개방일정과 관세율 등은 '94년 2월 15일 결정나게 되었다.

쌀 개방문제가 엄청난 파문을 일으키며 나라 전체의 여론을 휩쓸자 쇠고기등 타 농축산물의 개방문제는 여기에 가려진 채 결정이 나 버린 것이다. 피해는

유제품, 쇠고기 수입 협상 결과

○ 유제품

- BOP졸업에 따른 개방 이행 계획에 따라 이미 '93년도 시유개방, '94년 커드(치즈원료) 개방이 확정되어 있음.
- UR협상에서 가공치즈와 기타 치즈, 조제분유 유장 등이 '95년부터 개방됨

품명	내용
가공치즈 HS0406 30,000	관세율 40%, '95년 1월 1일 개방
기타치즈 HS0406 90,000	"
조제분유 HS1901 10·1010	"
HS1901 ·10·1090	"
유장 HS0404 ·10·1000	관세율 99% '95년 1월 1일 개방
HS0404 ·10·9000	2,300톤 킬로그램 매년 10%씩 킬로그램 증가
	관세율 2004년 50%

○ 쇠고기

- 기존 킬로그램을 확대하여 2000년까지 의무수입
- SBS 물량을 10%씩 확대하여 미국산·위주 수입하고 마크업(Mark-up) 페지

년도	킬로그램(천톤)	관세(%)	마크업(%)	SBS(%)
1993년	99	20	100	15
1994년	106	20	95	20
1995년	123	43.6	70	30
1996년	147	43.2	60	40
1997년	167	42.8	40	50
1998년	187	42.4	20	60
1999년	206	42	10	70
2000년	225	41.6	0	70
2001년		41.2		
2002년		40.8		
2003년		40.4		
2004년		40		

* 마크업이란 SBS 수입물량에 대한 부과금으로서 촉발기금에 납입됨.

더 크면서도 반응 또한 약한 것이 사실이다.

양축농가의 실망과 우려는 말할 것도 없고 더이상 소를 기를 수 있는냐는 반문이 이어지고 있다. 하기는 '89년 12월 이미 GATT에서 BOP 졸업을 선언하면서 '97년 7월 부터 완전 개방 이행이라는 통보가 나왔으니 상당히 무디어져 있고 이제는 스스로 포기하느냐의 선택만 남은 셈이라고 하며 의지가 약해져 있다.

UR협상을 앞두고 취한 정부의 대응자세에 있어 많은 불만이 제기되었다. '93년 11월 까지만 해도 정부는 쌀을 비롯해 쇠고기, 유제품 등 4~5개 품목의 개방은 절대 불가, 그리고 기타 기초농산물에 대해서는 융통성 있게 대처하면서 협상을 벌이겠노라고 주장하였다.



대통령이 아펙(APEC)회의 참석차 미국을 다녀오자 분위기가 슬슬 달라져 갔다. 야당의 끈질긴 쌀 개방 밀약설 공세에 그리도 확고했던 정부자세는 어느새 개방 불가피로 선회하고 말았고 여기에는 주로 쌀이 거론의 초점이 되었다. 물론 협상을 앞두고 정부의 의지를 강하게 표현하기 위한 공략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앞선 지난 10월 쯤 느닷없이 쌀 시수를 위해 기타 농산물 개방 불가피설의 농정책임자 기자회견은 무슨 의도에서 나왔던지 한심하기 짝이 없다. 농민의날 기념식에 참석했던 허신행장관은 그 사실을 강도 높게 부인하였지만 다 사실로 드러나 지금 정부에 대한 불신만 가중시킨 결과가 되고 말았다.

UR협상 전문성의 부재, 외교력의 부재를 그대로 노출시킨 예이다. 또 그런 것 쯤은 이해한다 치고 정부의 호언장담 발언이 불과 수일새 바뀌어 쌀 개방협상 시한을 앞두고 개방 불가피론을 제시하며 국민 무마를 위해 나서는 것은 무슨 연유인가? 협상에 임하기도 전에 백기 선언하고 나오는 정부태도에 처음부터 정부의 강한 의지가 있었느냐를 누구나 쉽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쉽게 망각해 버리는 국민성향을 두고 볼 때 이러한 비판역시 쉽게 잊혀져 가게 될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이다.

국민저항 운동을 불러 일으켰다

쌀을 비롯한 기초농산물 즉 '91년도에 정부 스스로 비교역적 품목(NTC)으로 15개 농산품을 설정하여 절대 개방불가를 주장해 온 것이 정부의 일관된 방침이었다. 물론 국력이 약한 우리로서 힘으로 누르는 미국의 압력앞에 15개 모두를 지킬 수 있다고 믿은 농민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개방으로 가는 길이 열려야 하는 상황이라면 진작부터 대비하는 정부의 노력은 있었던가에 한결같은 의문이다.

한마디로 경제분야 핵심관료들의 사고방식이 농업 포기론으로 기울어져 있었기 때문에 무엇하나 되는 일이 없었던 것이다.

지난해 12월 초에 접어들면서 쌀개방 불가피론으로 정부의 입장이 기울자 농업문제를 걱정하는 국민적 저항 또한 만만치 않았다. 우리협회를 비롯한 농민단체와 종교, 사회, 시민, 여성, 노동단체등 2백개에 가까운 단체들이 일순간 뜻을 같이하여 「쌀 및 기초농산물 수입개방저지 범국민 비상대책위원회(약:범대위)」를 결성하였고 개방저지 선언을 하였다. 범대위는 12월 7일의 서울역에서 대규모 시위를 주도하면서 전국 농민의 조직적 저항운동에 불을 밝혔고, 문민정부 출범후 개혁 정국에 찬물을 끼얹는 엄청난 정국변화를 연출시켰다.

쌀만은 대통령직을 걸고 막겠다던 김영삼대통령의 도덕성에 큰 타격을 주었고, 대통령 농정공약에 많은 허구성이 그대로 노출되게 되었다. 특히 미국의 힘에 의해 개방은 진작부터 예견되었다 하더라도 왜 우리의 요구는 끝까지 뺄아보지도 못한채 항복하느냐 하는 협상 자세에 대해 범대위는 지적하고 있다. 미국이 14개 농산품의 개방예외를 갖고 있고 나프타(NAFTA) 조약 체결국간 즉 미국, 캐나다, 멕시코 간에 개방예외인정, 미국과 EC간의 농산물 보조 인정 등 예외투성을 스스로 자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이런 문제들을 이의를 제기하여 다소나마 우리에게 유리하게 협상조건을 받아내지 못하는 정부의 협상태도에 불만을 노골화하고 있다.

지난 12월 15일 UR 농산물 협상 시한역시 미국의 회가 행정부에 요구한 일정에 불과할 뿐 UR협상은 '94년 4월까지 쌍무협상으로 계속될 수 있는데도 한국

정부는 미리부터 포기상태에서 협상한다는 근본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나아가 국회에서의 비준거부 운동 전개는 물론 농산물 개방저지에 소극적인 국회의원소환 운동, 수입개방에 대한 국민의사를 묻는 국민투표 실시 등 국민행동요령을 발표하고 이를 실천운동으로 전개하고 있다.

흔히 말해 왔듯이 농촌이 국민 모두의 마음의 고향이라 그러했는지 재야를 비롯한 운동권의 입지를 제공해 준 호기가 되었고, 농촌문제에 거의 이견없이 운동전개 단계까지 합의되는 '결성의 장'을 마련해 주었다. 결국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내각개편, 민자당 지도부 개편등 정국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다.

농정불신 더 이상은 위험하다

문민정부가 출범하면서 농업에도 예외없이 신선한 기대에 부풀었다. UR 협상으로 기대에 반비례한 충격도 그래서 더 크지도 모른다. 농업문제 해결에 있어 농림수산부 힘으로 해결하는데는 부처간의 대립내지는 이해관계 때문에 한계가 있었고 따라서 별로 해결되는게 없었다.

대통령 선거 공약사항중 가장 획기적인 것으로 평가된 것이 농정특보 제도와 대통령 직속의 농어촌발전위원회 신설건이었다. 대단한 기대를 부풀렸던 이 제도 역시 없었던 일처럼 어물쩍 넘겨왔고 UR협상으로 문제가 심각해지자 농정수석을 신설하게 되었다. 그런데 농어촌발전위원회는 또다시 변형시켜 국무총리 직속으로 하겠다는 계획이 제시되자 일제히 농민단체들의 반발이 나왔고, 아예 대통령이 농업문제를 직접 챙기기 전에는 정부와 일체의 대화를 거부하겠다는 결의까지 튀어 나왔다. 밖으로는 개방압력 때문에 풍전등화의 상황이고 안으로는 정부의 공약 불이행과 미숙한 농민부마 작전으로 농민과 정부가 갈등을 벌이는 상황은 참으로 불행한 사태가 아닐 수 없다. 이리도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는 정치력으로 어떻게 선진국대열에 자처하면서 선진국도 예외로 버티는 농산물개방을 자초하고 있는지 안타까울 따름이다.

농민단체들이 대통령 직속으로 해야한다고 주장하는데도 몇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농민의 정부불신이 이리도 깊은 시점에서 새

로운 공약 남발이전에 대통령 스스로 공약한 사항을 실천하라는 촉구가 그 하나이다.

둘째는, 앞서 지적한대로 수입개방에 임하여 이제 완전 자율적인 경영이 되도록 해야 하고 각종 제한 조치나 규제 일변도에서 과감히 해제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고 이를 위해서는 대통령 스스로 약속한 대로 대통령이 직접 농업문제를 챙겨 나가는 의지가 있을 때 부처간 복잡하게 얽힌 문제를 해결하고 신속히 처리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과제가 해결되는 것이 지연되고 논쟁만 계속된다면 농업전체의 불행이 분명하다. 농정불신, 더이상 확대되면 농민은 물론 나라 전체의 불행으로 연결될 수 있다. 개혁의지로 시원스럽게 사정작업을 끌고 왔던 정국의 모습처럼 농민요구에도 뭐가 후련히 뚫리는 정치력이 무척 아쉽기만 하다..

농정의지에 달려있다.

수입개방에 대응해서 살아남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 정부의 농업에 대한 의지가 어떠한가에 달려 있다고 본다. 대통령의 사과 담화에서 밝힌대로 획기적인 대책으로서 농민요구를 전적으로 수렴하는 제도로 전환된다면 살 것이요, 구태의연한 방법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시기만 문제일 뿐 우리 농업은 사망길을 갈 수밖에 없다.

낙농육우산업의 예를 보자.

앞서 지적한대로 영세 수준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낙농업이나 육우업의 경쟁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경쟁력이 배양되는 수준으로 정부의 지원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 수준은 우리 농민이 현실적으로 실감하고 인정하는 정도 즉 선진국의 지원 수준이면서 정부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정도이어야 한다.

지원의 방법은 개별 농가에 직접 지원하는 방법과 농민조직 즉 낙협 등 유통조직의 직접적인 지원육성 조치, 금융세제 지원방법 그리고 법적 규제의 과감한 해제조치와 개정등이 될 수 있다. 낙농업과 육우업의 세부적인 대책방안은 물론 따로이 제시되어야 한다. 문제는 우리의 간곡한 건의와 요구가 겸허하게 수렴되어져야 하는데 그런 과정이 이번에도 무시된다면

문제인 것이다.

그동안 대통령 선거공약과 그 이후 당정간 논의를 통해 약속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조치등이 해결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사안을 두고 볼 때 낙관하기가 어려운 것 만은 사실이다. 기회있을 때 마다 건의해 온 어떻게 보면 진부한 과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 다른 모든 문제들이 풀릴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 예로 한우조합설립문제, 부가세 영세율 적용문제, 낙농진흥법개정문제, 분뇨시설 등 시설장비 지원문제, 무허가 양성화 조치, 송아지가격 지지제도, 사료공장 설립 신고제 및 TMR 제도 정착을 위한 지원조치, 마사회 이관조치 축산물 가공허가권 이관 문제등은 이미 수도 해야 할 수 없이 거론되어 왔었다.

낙농육우산업 나아가 농축산업을 살리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만 있다면 결코 어렵지 않게 풀릴 수

있는 과제들이다. 새로운 정책이나 제도를 개선한다는 거창한 구호이전에 쌓여있는 현안 과제들을 하나씩 실천하는데서 정부의지는 확인될 수 있다.

지금의 농업문제, 농민만의 과제는 아니다. 농업과 식량의 문제, 그것은 국민 모두의 과제요. 관심사이다. 농업의 흥망은 곧 나라의 흥망을 뜻한다. 더 늦기 전에 그리고 더 크게 후회하기 전에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농업문제의 해결에 농민 비농민 따로 있을 수 없고 여야가 구분될 수 없다. 농업을 살려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국민 모두의 관심이 집중될 때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실천으로 옮겨져야 한다. 그길만이 개방에 대응하여 농민과 정부 모두가 단합하여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기 때문이다.

단미사료(전지대두, 면실, 비트펄프 펠릿) 공급안내

낙농육우산업 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리며 귀회(목장, 조합)의 일익 번창을 기원합니다. 우리협회는 회원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단미사료 구입의 편의제공을 위해 단미사료(전지대두, 면실, 비트펄프 펠릿)를 저렴하게 아래와 같이 공급하오니 회원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아 래 -

- 1) 공급품목 : 전지대두, 면실, 비트펄프 펠릿
- 2) 공급단가 및 포장단위

품 명	포장 단위	1 지 역	2 지 역	3 지 역	상 차 도	비 고
전 지 대 두	50kg /포	375원 /kg	380원 /kg	385원 / (전지대두)	355원 /kg	인천상차
면 실	40kg /포	255원 /kg	260원 /kg	265원 /kg (면실)	235원 /kg	
비트펄프펠릿	50kg /포	175원 /kg	180원 /kg	185원 /kg (BPP)	155원 /kg	인천상차

※ 지역구분

1지역 : 서울, 인천, 경기 2지역 : 강원, 충남·북, 경북 3지역 : 경남, 전·남북

- 3) 신청기한 : 1994년 1월 20일까지
 - 4) 신청방법 : 작업장 상차도 조건으로 직접 인수 할 농가 및 낙우회에서는 신청수량의 제한이 없으나, 목장까지 수송을 희망하는 농가는 수송의 원활을 위해 1차지당 최소 5톤이상 신청 바랍니다.
 - 5) 공급시기 : 1994년 1월 중순경
 - 6) 대금의 납부 :
 - ① 1차 선납금 : 신청과 동시 총금액의 50%를 온라인으로 납부
 - ② 2차 선납금 : 나머지 50%를 1994년 1월 10일까지 납부
 - 7) 납부구좌
 - ① 농 협 : 087-01-108205, ② 축 협 : 051-11-120361, ③ 예금주 : 한국낙농육우협회
- 기타 자세한 문의는 본회 알선사업부로 연락 바랍니다.(전화 : (02) 588-7055~6, 584-5143, 521-7181)

사단법인 **한 국 낙 농 육 우 협 회**